

# 혁신당 “민주, 13일까지 답 없으면 합당 무산” 최후통첩

조국 대표 “합당 시기 15일 수용 가능”…민주, 내일 의총서 공식 입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달라”며 합당 논의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오는 10일 의원총회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달라”며 “조국당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이 공식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합당 시기가 2월 15일이라고 하면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대표는 합당 논의 과정에 “어떠한 밀약도 없었고, 어떤 지분 논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통합 논의에 심각한 장애물”이라며 “경고한다. 저당 조국당을 내부 정치투쟁에 이용하지 말라. 우당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켜라”고 촉구했다.

또 “정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다”며 “제가 요구

한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 결정하면 대표 간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 7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며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재정적 이익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다가 몰락한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며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의 요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정훈(왼쪽 네번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광주 5개 구청장, 대전 중구·유성구청장이 8일 광주 동구청 3층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마친 뒤 공동건의문을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 광주 5개 구청장 “독자 예산·권한 보장해달라”

신정훈 행안위원장, 광주 5개 구청장-대전 중구·유성구청장 간담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기초 자치구에서 ‘독자적인 예산과 권한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 5개 구청장, 대전 중구·유성구청장과 ‘행정통합 특별법 자치구 의견 반영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통합추진 지역 기초단체장은 자치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으로 가야 정수 조정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위와 협의해 반드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통합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시·군·구에 상당 부분 이양하는 방안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회 역시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회처럼 예산과 법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의회에서 재온지 부의장과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흥기월·임미란·이명노 의원이 참석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통합단체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같은 기초지방정부지만, 재정과 사무 권한에서 차별받는 현실이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돈줄’인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다.

현재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자치구는 광역시를 거쳐 조정교부금을 받는 구조다.

협의회는 “통합특별시 안에서 시·군은 교부세를 받고 자치구는 소외된다면 재정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주는 조항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구장에게도 시장·군수와 동등하게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광주와 대전의 자치구들이 연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제기된 재정과 권한 이슈가 법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민주 광주시당 지선 공천 171명 신청

기초단체장 22명·광역 61명·기초 88명 등록…본격 심사 돌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일꾼을 뽑는 후보자 공모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진입했다.

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및 지방 의원 후보자 공모 결과 총 171명이 접수를 마쳤다.

선거구별로는 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에 22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광역의원 61명과 기초의원 88명이 각각 등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자치구별 기초단체장 신청 현황을 보면 북구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5명, 동구·서구·광산구가 각각 3명씩 신청했다.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55세였으며, 연령대별로는 45세 이상 60세 미만이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은 64명, 45세 이하 청년층은 21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여성 신청자가 57명에 달해 향후 비례대표 공천 과정까지 고려하면 여성 정치인의 참여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단에는 겸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나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 분의 후보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 관계자는 “후보자가 현지화 적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주권위원회(공관위)의 정밀한 판단을 거쳐 추가 신청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당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직무 역량 등을 꼼꼼히 따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최적의 후보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모는 지역구 후보자에 한해 진행됐으며,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접수는 추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총-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